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을 촉구 거리선전전

✎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0.05.26 22:47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6일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안 터미널 일대에서 거리선전전을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거리선전전

본부는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가 종료되었고 노회찬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끝내 폐기시켰다"고 전하며 "20대 국회가 무책임하게 폐기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우선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 시민과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망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는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월 21일 현대중공업의 올 해 5번째

사망재해, 5월 13일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재해, 5월 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 20대 청년 노동자 파쇄기 끼임 사망재해 등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 기업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거리선전전

민주노총은 지난 25일부터 국회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